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

Republic of India

2019년6월11일 | 책임조사역(G3) 이자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287천 km ² 	인구 1334.22백만명 (2018기준)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27,886.47억 달러 	1인당GDP 2,090.10 달러 	통화단위 Rupee 	환율(\$기준) 68.39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1년 인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15년 7%대의 성장으로 당시 6%대의 중국을 추월한 인도는 이후에도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17년 GDP 규모 기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상승하였음.
- 세계 2위의 인구 규모 및 인구 절반이 25세 미만인 젊은 인구 구조를 보유하여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Modi) 총리가 2024년까지 재집권하게 되어 기존 개혁 정책의 추진력이 한층 강화되고, 친시장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당분간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0 수교 (북한과는 1973.12.10)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76년, '06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86년, '16년 개정), 투자보장협정('96년), 세관협력협정('06),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0년),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14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11,596,286	15,055,543	15,606,221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패션잡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4,189,284	4,947,847	5,884,707	석유제품, 알루미늄, 합금철, 정밀화학원료, 의약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1,095건, 5,953,99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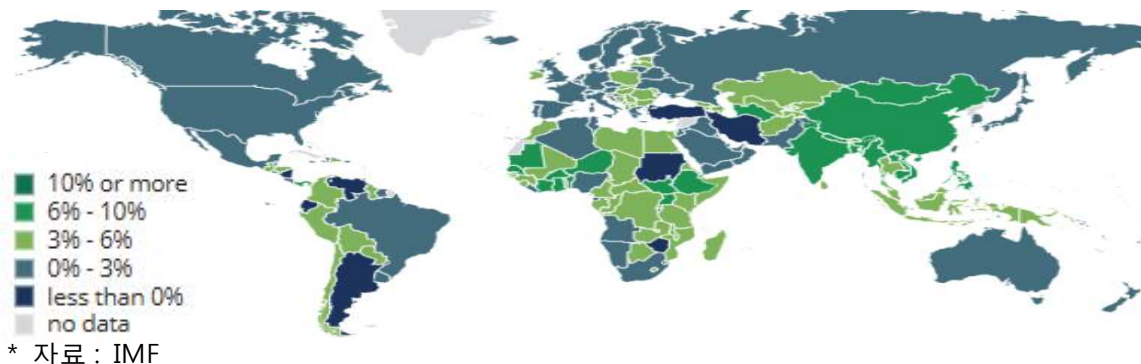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7.4	8.0	8.2	7.2	7.1
소비자물가상승률	5.8	4.9	4.5	3.6	3.5
재정수지/GDP	-7.1	-7.2	-7.1	-7.0	-6.7

자료: IMF, EU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제조업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7%대 경제성장률 시현

- 인도 경제는 유가 변동 등 대외적인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간 연 7%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다만, 농촌 지역의 수입 감소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가계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은 2015~16년의 8%대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전 세계 GDP성장률



인도중앙은행(RBI) 정책금리 인하

- 물가상승률 하락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월 정책 금리를 6.25%로 25bp 인하한 데 이어 4월에 6.00%로 다시 낮추었으며, 6월에 추가로 25bp를 인하하였음.
- 인도 중앙은행도 내수 시장에 대한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책금리 변경을 실시하였다고 밝힘.

만성적인 재정적자

- 2017년에는 인프라 개선과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확대된 GDP대비 -7.0%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인프라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합간접세(GST) 시행과 조세개혁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전년대비 하락한 GDP대비 -6.7%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시현함.
- 인도 정부는 2016년 11월 화폐개혁 실시를 통한 비공식경제 축소로 세원을 확대하고, 2017년 7월 GST 법안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2017~20회계연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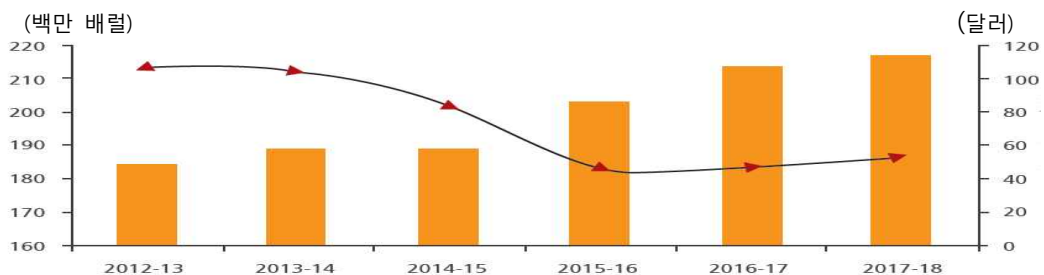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27,314	-22,457	-12,114	-38,168	-64,856
경상수지/GDP	-1.3	-1.1	-0.5	-1.4	-2.4
상 품 수 지	-144,047	-136,884	-107,476	-148,134	-186,895
상 품 수 출	328,387	272,353	268,615	304,107	332,088
상 품 수 입	472,434	409,237	376,090	452,241	518,983
외 환 보 유 액	295,947	327,840	336,583	385,104	369,798
총 외 채	474,659	484,989	471,852	578,278	623,178
총외채잔액/GDP	23.3	23.1	20.6	21.8	22.9
D.S.R.	8.4	9.9	9.0	9.1	9.7

자료: IMF, EIU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수입 증가 등에 영향으로 상품수지 적자 폭 확대

-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2,0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액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07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다만, 2018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수입액 증가 등으로 1,904억 달러로 확대됨.
- 인도는 2016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4.4백만 배럴/일)으로, 원유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원유수입량 및 국제 원유가격
(— : 원유수입량, —▲— : 평균원유가)



* 자료: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외채상환능력

외채 구조 및 외환보유 규모 등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 대체로 양호

- 2018년 기준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2.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 비중이 2018년 약 83%로 외채구조가 양호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7년 9.1%에서 2018년 9.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9%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원유수입국으로서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제재조치에 따라 세계 주요국으로서 국제유가 상승 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 인도는 원유 수입량의 약 12%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란은 인도의 가장 가까운 원유 공급지일 뿐만 아니라, 인도 루피화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 때문에 인도의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임.
- 금번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터키와 인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인도 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인도 GDP는 0.15% 하락하며 소비자물가를 0.2% 끌어올릴 것이라 분석함.

사이클론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불리한 환경

- 인도 벵골만 지역은 통상 4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이클론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농작물 피해 및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음.
- 2019년 5월 인도 동부에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파니'로 인해 약 1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EIU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기후 변화로 인해 약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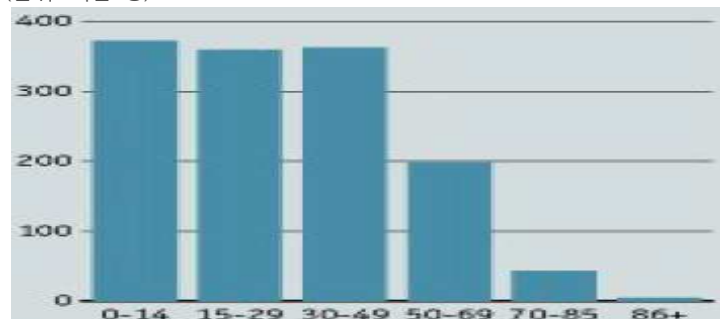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세계 2위의 인구 대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

- 인도는 약 13.3억 명(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의하면 2024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 인구의 절반이 25세 미만이고 65%가 35세 미만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8억 5천만 명에 달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함.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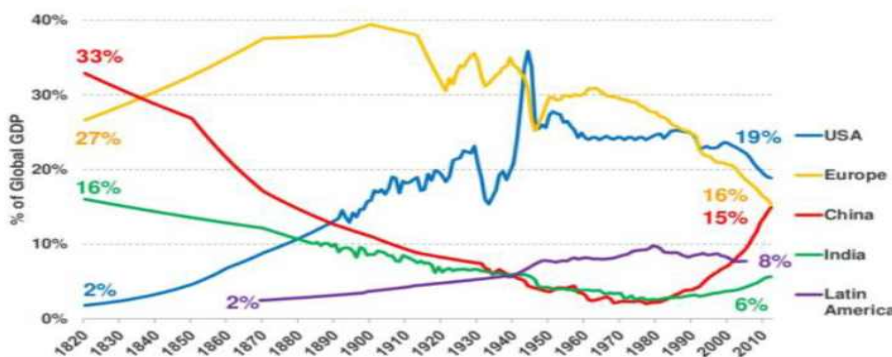
* 자료 : EIU

정책성과

모디노믹스, 개혁·개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현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한 이래 경제개혁과 추진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추진을 통해 7~8%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인도를 2017년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킴.
-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는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자동차·전자·섬유 등 25개의 육성산업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 기준 14%였던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을 2022년까지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100개의 Smart City 건설,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등 5개의 산업 회랑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도시·지역 간 연계를 강화를 도모하고, 동 계획과 관련하여 초고속 열차 건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 경제에서의 인도의 위상



* 자료:KPCP

정부, GST 세입 증대를 통해 인프라 등 투자여력 확보

- 2017년 7월 중앙정부와 29개 주 정부 간에 상이한 간접세 세율을 통합하였으며, 이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시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임.
- 석유제품·주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로 0%/5%/12%/28%등의 4단계로 차등 부과됨.
- 인도 재무부는 '19.4월 중 상품·서비스세(GST)를 통하여 1.1조 루피 규모의 세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GDP의 약 0.6%를 차지하며,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함.

기업경영여건 대폭 개선, 77위로 급부상

- 모디 행정부가 지난 4년 간 추진한 조세개혁 및 규제 철폐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여건 순위가 2014년 142위에서 2017년 100위로 상승한 데 이어 2018년에는 77위로 급등하였음.
- 소액투자자 보호(7위), 자금 조달(22위), 전기공급(24위), 건축인허가(52위) 등은 양호한 반면, 창업(137위), 계약이행(163위), 재산권등록(166위) 등에서는 아직 하위권에 위치함.

정치동향

인도국민당(BJP) 2019년 총선에서 압승, 모디 총리 2024년까지 재집권에 성공

- 2019년 4월 11일부터 총 7차례 걸쳐 실시된 인도 총선의 결과가 5월 23일 발표됨.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운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는 국민민주동맹(NDA)이 연방 하원 총 543석 중 352석(BJP 단독 303석, 기타 정당 49석)을 획득하여,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가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되었음.
- 2018년 12월 힌두 벨트 지역 3개 주(차티스가르·마디아프라데시·라자스탄) 선거에서 높은 실업률 및 농촌 소득 감소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면서 모디 총리의 재집권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2019년 2월 파키스탄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안보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지지세를 회복하였고, 결국 민심은 모디 총리의 재집권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선택함.
- 모디 총리가 2014년 총선 결과(282석)를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기존 친시장·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사회동향

카스트 제도가 남긴 폐해 등으로 인한 불만 표출

-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BJP가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신분 차별 범죄가 크게 증가함.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달리트*(Dalit)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달리트에 대한 학대와 폭력 등의 범죄도 60% 이상 증가함.
 - * 기존 카스트 제도 상 4계급[브라만(Brahman)·크샤트리아(Kshatria)·바이샤(Vaisya)·수드라(Sudra)] 체계에 속하지 않는 불가촉천민 계급임. 인도 전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약 15% (2억 명)를 차지함.
- 2018년 3월 인도 대법원이 불가촉천민의 보호를 완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이후 달리트 계급의 시위가 크게 늘어남.
- 2018년 4월 '특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보호법' 완화에 반발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경찰과 충돌하여 11명이 사망함.
- 이들은 인도 정부가 카스트 제도에 의거하여 계급 차별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불교로 개종하기도 함.
- 카스트 제도는 1947년에 법적으로 폐지되어 법률상 카스트 신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나, 인구의 70%가 카스트 관습이 존재하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함.

모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위 발생

- 2019년 1월, 인도 전국에서 약 2억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다양한 노동조합 형태로 연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였음.
- 델리(Delhi)·뭄바이(Mumbai) 등 대도시에서부터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모디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소외 문제를 제기하면서 높은 실업률 해결 및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등을 요구하였음.

국제관계

파키스탄과의 카슈미르 지역 분쟁

- 2019년 2월 14일 인도 정부 소속 중앙예비경찰대(CRP) 요원 44명이 풀와마(Pulwama) 지역을 지나던 중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 테러의 배후는 파키스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이세 모하메드'(Jaish-e Mohammed)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인도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공군기를 투입하여 테러 근거지를 공습하는 등 양국이 서로에게 폭탄 공격을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음.
-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습과정에서 생포한 인도 조종사를 2일만에 석방함으로써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번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4월 1일 다시 총격전이 발발하여 7명이 사망하는 등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테러발생 지역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응하여, 미국·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미·일 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인도를 군사·외교 정책상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음.
- 2019년 5월 인도와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항하기 위해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다만,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를 채택한 관계로 특정 국가와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강한 편임.
- 인도는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장 노력에 대응하여 벵골만 7개국 협의체를 주도하는 등 지역 내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2018년 7월에 네팔에서 개최된 벵골만기술협력체(BIMST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접 국가들과의 결속력을 다졌음. 금번 정상회의는 2004년, 2008년, 2014년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됨.
- 1997년 설립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인도·태국·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랑카·네팔·부탄 등 벵골만에 위치한 7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

- 2018년 9월 말 기준 인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 지원액은 341.2억 달러(단기 56.2억 달러, 중장기 285.0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중장기 68.9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연체금액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장기 채무 연체금액(백만 달러): 55.7('16년 말)→67.2('17년 말)→68.9('18.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18.06)	3등급(2017.06)
Moody's	Baa2(2019.04)	Baa2(2017.11)
Fitch	BBB-(2019.04)	BBB-(2018.04)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S&P, Moody's, Fitch는 모두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3년 6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S&P도 2014년 9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함.
- Moody's는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개혁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여 2017년 11월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함.

-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서비스 부문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7.2%로 전년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8년에도 소비지출 및 공공 인프라 지출 확대 등으로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시현함.
- 인프라 개선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약 -7%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상태임.
- 친기업 성향의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 지속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 5월 총선 압승에 힘입어 개혁정책 지속 등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 속에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 격화 및 역내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